

‘시민권력’ 시대 시작됐다

탄핵 이후 한국사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사회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치 권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된 계기였던 19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사회적 변화와 쇠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 탄핵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통과와 박근혜정부 4년간 누적돼 온 실정과 정책 실패, 불통·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가져 온 시민들이 온라인·모바일 민주

가 있을지 주목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과연 유효하게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사드 배치의 경우 중국이 최근 들어 한한류(限韓流) 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관광객 급감·한류 콘텐츠 수출 급저 등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유보 또는 재검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분야에서도 조기 대선에 따라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급강상 관광·개성공단 운영 재개 등에 대한 희망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상황에서 정치 주체들이 내각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행정 체제 개편 등 개헌 문제, 승자독식 체제를 보정하기 위한 정치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수사권 제한

정치외교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 변화 주목 사회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급제동 불가피 경제 재벌개혁 등 정경유착 특단조치 절실

주의를 통해 연인원 600여만명의 촛불집회를 개최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많은 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국민권력시대’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필요한 법규정치의 의견 수렴과 정치적 절충을 받아 19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낡은 사회 시스템·권력 구조의 개편 등 본질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난해 말 체결돼 실행 단계인 한일 위안부 합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현안에서도 변화

등 검찰 개혁, 국정원·청와대·국회 등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 등 권력 기관 개혁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 갈지도 주목된다.

사회 분야에서도 당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부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부분의 역사학계 및 야당·진보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해 왔던 터라 이번 탄핵으로 실질적인 동력을 잃게 됐다. 세월호특위 재가동 등 진상 규명·유가족 농성 해산 등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 등 언론 자유 강화, 친일파 청산, 주요 공기업 민영화 조치 철폐, 성과연봉제 확산 등도 조기 대선 돌입 시 각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촛불집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의 폭이 넓은 것으로 확인된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표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

금지·차별 철폐, 인권 강화 등의 계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사회보장망 확충, 양극화 해소, 교육 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촌 한신대 교수는 “아동, 청소년, 노인들에게라도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 해줘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정유라 문제에서 드러난 부유층들의 비뚤어진 교육열을 시정해, 배우고 싶은 자에게 누구나 기회를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사열화된 주입식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공조가 확인된 만큼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져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조치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조치, 기업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호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치권이나 권력 기관의 변화보다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성과를 평가받는 기업이 변하는 게 더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bskim@

“촛불이 탄핵한 날” 광화문·여의도 환호

시민들 표정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거리로 나왔던 촛불의 승리였다.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 여의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모였던 2만여명(정추측 추산, 오후 4시 현재)의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했다.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여의도로 왔다는 강 모(73)씨는 “기다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탄핵이 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민 이진석(39)씨는 “이미 촛불 민심에 사실상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법적으로 탄핵당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에서 온 주부 성 모(58)씨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당연한 결과”라면서 “민심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무릎이 굽을 수 없게 되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이 승리를 그동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탄핵 가결은 국민 전체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담담한 어투로 말했다. 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 촛불 항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각 내려오라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국대토론회, 국회포위행진 등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2차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국회를 개방하라” 등을 외치며 탄핵 가결을 위해 국회를 압박했다. 퇴진행동은 당초 국회 본관 광

장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주말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촛불 민의에 따라 탄핵이 가결되면서 주말 촛불집회는 기존처럼 문화제와 행진이 결합된 평화적 집회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에 찬성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촛불의 성토는 이어질 것이며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도 촛불이 올라갈 공간이 있다.

6주 연속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광장에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기쁨의 장’으로 바뀌었다. 세월호 진상마중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김현주(44·여)씨는 탄핵 가결 소식에 “정말 좋다” “기쁘다”를 연발했다. 김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7시간인데 앞으로 특검을 통해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 6·7일 있었던 ‘최순실 청문회’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친박의 정경유착을 낱알이 알게 됐다. 그것처럼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생중계해 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세월호 7시간 진실에 대해 쓰여 있는 패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김 모(79)씨는 “심정이 기쁘다”란 말로 탄핵 가결의 순간을 표현했다. 김씨는 “나도 그동안 텔레비전을 봐서 아내도 확실히 대통령이 무능하다”며 “남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대통령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얘기했다.

대학생 추다솜(26·여)씨는 “오늘을 매우 기뻐한다”고 운을 뗐다. 추씨는 “탄핵 가결은 대통령에 얽힌 의혹들을 밝히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주범들을 처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며 “그동안 우리가 궁급했던 사건들의 내막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사는 전은순(54·여)씨도 “이번 결과를 생수 듣고 환영한다”고 했다. 전씨는 “촛불집회에 네 번 참가하면서 참원 시민들의 분노와 정의를 원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공감했다”며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새누리당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재벌들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야 한다”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하영·김보령 기자 hki@

황 총리 “책임 통감... 국정 중단없다”

권한대행체제 가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황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은 ‘사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한시적으로 국정을 유지·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대국민담화 곧 발표= 우선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쟁긴다. 황 총리는 탄핵 결정이 발표되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을 전달한다. 특히 외교·안보, 경제 관련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

책을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도 담는다. 국정현안 가운데 경제·민생 등 시급한 과제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내각에 당부한다.

황 권한대행은 또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는 ‘정국 혼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자격으로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모든 내각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내각이 동요하지 말고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외교 행보도 주목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에는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반기문 당시 외교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주변 4개국을 비롯한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전하도록 했다. 황 권한대행도 주변국 등에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냉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탄핵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

랭한 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서둘러 풀어나가야 없으면 국면이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할까= 황 권한대행은 정부청사 내의 총리직무실에서 주로 머물면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상황인 만큼 세종청사보다는 서울청사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다.

고건 총리가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리스·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태국 등 친선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을 때 뿐이었다. 이 역시 외교 의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행사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시급한 기관장 인사인 경우, 권한대행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국 상

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파탄 책임론과 인사문제, 향후 선거의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황 권한대행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 총리의 교체까지 추진할지, 국회의 합의의를 통해 인사문제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1·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경원은 48명이다. 여기에 경찰과 군 등이 경호를 지원하게 된다. 총리는 경찰의 경호를 받지만, 앞으로 청와대 경호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보완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icho@